

여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합의... 2월 처리

24일 본회의

3+3협의체, 정부조직법 일부 합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협의로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3+3협의체'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에 합의했다.

여야는 재외동포청·국가보훈부 2개 항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가부 폐지, 우주항공청 신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 쟁점 사안은 양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에 양당 간에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에 큰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 의장은 "여성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대국민 약속이었고, 폐지 방침에는 변함 없다. 민주당에서는 동의 안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관련되는 것들이 (정부에서) 넘어올 텐데,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으로 넘기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새롭게 봐야 될 우주항공청과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여가부의 존폐 문제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도 범위·시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성환 의장은 "공운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에 각각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작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과정에서 소위 대통령 통치 기구와 관련된, 인사검증단과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경찰국은 기존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 상 합법성을 갖는 게 좋

겠다"며 "취지의 의견 있어서, 별도 법률로 제안해서 추후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15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법안 등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주호영 "文 정권 5년 내로남불... 국회 불신 초래"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행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불신의 중요한 원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국회 불신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과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인사·재정·입법·적폐청산·민주주의 타령' 5개 항목으로 나눴는데, 이 가운데 '민주주의 타령'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면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열거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뿔뿔히 뜯어낼 수 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도왔고,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입법 추진에 관해서도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국회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다"며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 대부분을 무력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권 막말 문제, 가짜뉴스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촉구했다. 과도한 정치권 내 고소·고발 문제, '발의 건수' 위주의 부실한 입법 관행과 대체입법 미비도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김건희 특검' 본회의 직회부 추진

"2월 국회내 야권 공조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이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을 설득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및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으로,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11명에 못미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캐스팅 보터인데, 김 여사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

다. 민주당은 법사위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재적 5분의3, 18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따라서 쌍특검 실현을 위해 야당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 서명운동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추가조작 의혹 사건은 쌍특검이 답"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도 찬성하고 있다. 독립적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2월 국회 내에 구체적인 야권 공조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국회 정개특위 "국민 46.5%,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발표 57.8% "위성정당 방지제도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4일 외부 전문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런 인식은 30대(84.4%)와 40대(80.3%), 50대(81.7%)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찬성이 46.5%로 반대 의견(36.5%)보다 높았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촉발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8.8%로, 반대 의견(23.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

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57.8%)이 동의했다.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의견(61.4%)이 반대 의견(20.6%)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 대해 비동의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자의 54.1%가 반대했고, 찬성은 34.1%에 불과했다.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시·도지사와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47.8%)이 반대(34.0%)보

다 높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8~59세까지는 온라인조사,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개호, 황룡전차포사격장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육군기계화학교 황룡전차포사격장의 포사격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장성 진원면, 담양 대전면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황룡전차포사격장 포사격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피해, 지난해 도비탄 파편이 인근 학동마을 민가로 날아든 사고 등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실성 없는 국방부의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궁극적으로



는 포사격장의 전방 등 타지역 이전 및 통합을 통해 주민들의 위험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훈련용 탄을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탄으로 바꿨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선욱 기자